

성 인권 보호와 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15. 1. 16. 제정

<양성평등센터>

제 1 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 인권 보호와 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5조에 의거하여 본교 구성원의 성 인권 보호를 위한 예방사업 및 권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건관련자 보호) ①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출석 시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동반할 수 있다.

② 제3자인 신고인, 대리인, 참고인은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③ 사건처리를 위한 제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신고 접수 등) ① 센터의 전문상담사는 피해자,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또는 단체의 신고가 있거나 상담을 통하여 성 인권 침해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를 센터장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 인권 침해 사건의 접수 및 조사·처리 과정에서 센터는 전문적 자문이 필요할 때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관계기관 또는 교내·외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③ 면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④ 성 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센터장은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격리 또는 피해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당 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교원의 수업 배제
2. 수강과목 변경
3. 지도교수 변경
4. 근무부서 변경
5. 그밖에 필요한 조치

제 4 조(소환방법) ① 사건관련자를 소환할 때는 본인에게 성 인권 침해 당해 사건 관련자임을 명시하고,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한다.

② 제1항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편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제 5 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건관련자와 사건처리에 관여했던 사람은 조사 및 사건처리 종료 전까지 당해 사건 당사자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훼손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사건 당사자가 사건에 대한 자료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단, 사건관련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사건처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열람을 불허할 수 있다.

제 6 조(자료 확보와 피해 구제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센터는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과 긴급한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7 조(조정) ① 피해자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조사위원회의 회부 전에 사건해결을 위한 조정을 할 때는 피해경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 쌍방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조정한다.

- ② 센터는 전항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피신고인이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다.
 ③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제3의 조정위원을 위촉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피신고인의 합의사항 불이행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8 조(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① 조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한다.

- ② 최종 조사 및 심의까지의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조사위원장으로 위촉된 경우,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녹화할 수 있다.

제 9 조(조사위원의 제척·회피) ① 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3. 위원과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가 속한 학과, 부서가 동일한 경우
-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유가 있는 때는 회피할 수 있다.

제 10 조(징계 및 기타조치) ① 조사위원회는 징계를 요구한 경우에도 기타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②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은 센터가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센터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수하도록 한다.
 ④ 센터장은 피해회복 및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신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성 인권 침해행위가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관련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구체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 11 조(자문수당) 조사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건 처리를 위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기록 및 자료보존) 센터는 성 인권 침해 사건의 상담, 조사·처리 과정 등 전 과정 기록을 보존한다.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규칙의 폐지) 이 시행세칙의 시행일부터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03. 1. 1. 제정되고, 2006. 10. 10. 최종 개정)은 폐지한다.